

경기변동기의 가계재정관리전략

여 윤 경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강사)

I. 서론

더블 딥(Double-Dip, 이중침체)과 디플레이션, 하드 랜딩(Hard-Landing, 경기 경착륙), 그리고 가계부채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전망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이며 2003년 경제계의 화두이기도 하다.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한국경제의 전망이 대체로 어둡다는 것이며, 실제로 경제관련 통계치가 하반기로 가면서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경제는 경기의 사이클 상 정점을 지나 둔화곡선을 타고 있는 경기순환적 요인과 북한 핵과 반미감정 및 정권교체라는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계 증권사인 리먼 브러더스는 신용카드사 규제 강화와 가계대출 축소 등으로 한국의 민간 소비지출이 앞으로 더욱 위축되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골드만 삭스 증권사에서도 현재 한국경제는 내수 위축, 향후 수출전망 불투명, 오일가격 상승에 따른 경기 위축 등 세 가지 불안정한 요인에 둘러싸여 있다고 평가했다(주간조선, 2003.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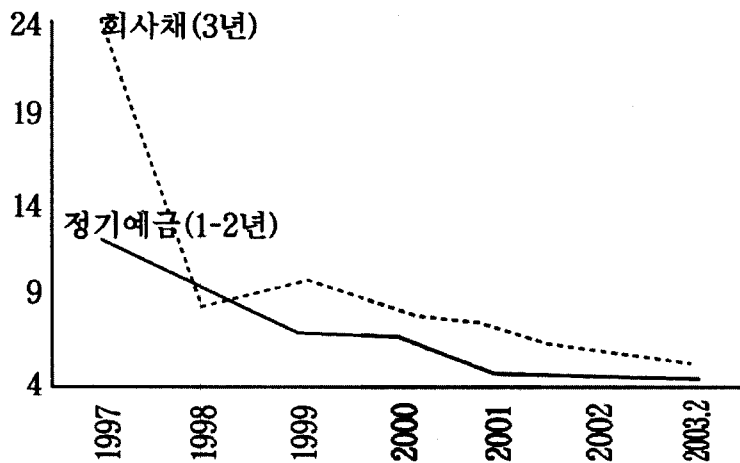
자금시장의 구조가 만성적인 초과수요에서 만성적인 유동성 과잉으로 바뀌어가면서 금리는 10년을 주기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계단식 하향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70년대에 30%대에 머물던 금리는 80년대에는 20%대, 90년대에 10%대로 떨어지더니 2000년대 들어 한 자릿수로 급속히 하락하였다. 외환위기 직후의 일시적인 고금리는 환율 폭등과 금융시

시스템 붕괴에 따른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이와 같이 경제가 고도성장 단계에서 안정 성장 기로 진입하면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동아일보, 2003년 4월 3일자).

이자에 대한 세금(이자소득세 16.5%)과 물가상승률(2003년 3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4.5%)을 감안한 실질금리는 이미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은행의 평균 예금금리는 2003년 2월에 연 4.45%였고, 일부 은행에서는 1년 만기 정기에금 금리가 3.8%까지 떨어졌다. 즉 10억 원을 정기에금에 맡기면 한달 이자가 300만원에 지나지 않으며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은 현금자산을 20억 원 정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금리 면에서 더욱 나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는 은행의 예금금리가 연 4%대로 떨어지면서 세금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인데 일본의 경우는 명목금리는 0.03%로 우리나라에 비해 낮지만 실질금리는 플러스이다(동아일보, 2003년 4월 3일자).

이러한 저금리는 경기침체, 투자위축 등에 따른 자금수요의 격감이 일차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경제의 불확실성의 증가가 저금리를 초래하게 된 보다 근본적인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1.9.5). 이러한 저금리 기조는 1980년대 이후 세계적인 현상이며 앞으로 장기화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저금리 상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금리의 대폭상승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정기에금과 회사채
금리추이 (단위: 연%)**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가 펼쳐지면서 대부분의 가계는 재무목표의 달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20대와 30대는 주택마련을 위한 목돈 마련에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고, 40대와 50대는 은퇴 후 노후생활자금의 마련을 더욱 걱정하게 되었으며, 60대와 70대는 이자소득이 격감하면서 생활비 마련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특히 연금 및 이자소득 의존계층과 퇴직자와 퇴직예정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어서 이들 계층의 소비가 크게 위축 되거나생활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저금리를 비롯한 이와 같은 경제환경은 문제의 속성상 급격히 호전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여건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면 개인의 재정관리전략도 당연히 시장상황에 맞춰 변화시켜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하드 랜딩을 하게 되면 주식, 부동산, 저축 등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전반에서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개인이나 가계에게 적합한 재정관리전략은 무엇일까? 우선 경기침체와 저금리 시대에 따른 개인 금융부문의 실태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재정관리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2. 가계재정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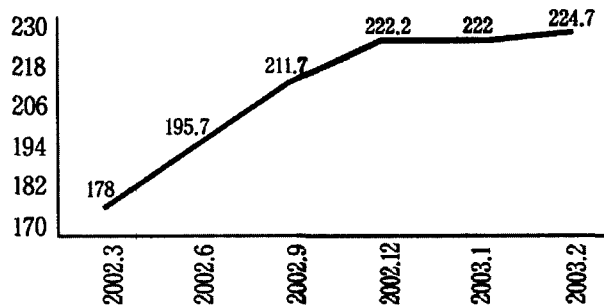
초저금리 또는 실질금리 마이너스에 따른 부작용이 경제의 각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연금 생활자들의 수입원이 막힌 것은 물론, 기업들도 각종 보유현금을 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기관들도 돈 굴릴 데를 찾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며 특히 가계 대출이 한풀 꺾이면서 투자 자금운용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은행은 수수료 등 비이자수익을 강화하는 한편 수신금리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부대수익을 강화시키고 있다. 가계의 경우, 가계저축률은 급격히 낮아지고 파생금융상품이나 복권열풍 등의 한탕주의, 투기성이 강한 곳에만 돈이 모이고 근로의욕은 저하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품, 파생상품 등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가지수 옵션시장이 세계 1위, 주가지수 선물은 세계 4위의 규모이며,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하여 이미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한국의 파생금융상품투자가 너무 빨리 증가하여 경제에 위험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3.2.12).

가계부채의 증가 - 채무 디플레이션 신드롬

채무 디플레이션 신드롬이 저금리로 인한 가계 부문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채무 디플레이션 신드롬이란 저금리 시기에 채무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져 상환능력 이상으로 빚을 지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들어 카드사 연체가 급증하고 신용불량자 수가 증가하고 개인파산을 초래하는 등의 배경은 바로 이러한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매경ECONOMY, 2003.2.26).

2002년 하반기 이후 경기 위축세가 심화되면서 가계대출의 부실화가 표면화되고 결국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우선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의 건전성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는데, 2002년 말 가계부채는 총 439.1조원으로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하였다. 부동산 시장 활황세에 따라 주택대출이 증가하고 저신용계층을 중심으로 카드사 현금서비스 이용이 급증한 것이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다. 개인부분의 금융부채에 대한 금융자산 비율은 1999년 2.85배, 2000년 2.63배, 2001년 2.44배, 2002년 2.09배로 점차 낮아지고 있어 금융부채의 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2.2.27; 삼성경제연구소, 2003.4.30). 특히 금리 및 경기변동에 따라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부채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가계의 이자지급 부담정도는 더욱 높아짐으로 인해 신용위험도가 급등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저금리의 장기화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세가 이어짐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가계파산도 급증시키고 있다. 이러한 신용불량자와 가계파산의 급증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되며,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 가계대출 추이(단위: 조원)



자료: 한국은행

신용불량자와 개인파산자의 급증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개인신용불량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파산 신청자 수도 증가하여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1996년 말 96만 명에 불과했던 신용불량자수는 2002년 말에는 26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03년 3월말 290만 명을 넘어섰고 (295만 6,794명), 6월말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3년 들어서면서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주로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억제하고 심사를 강화한 결과 때문이다. 특히 2002년 9월 이후 신용카드사들은 본격적으로 카드 사용한도를 축소하고 채권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여러 군데에서 돈을 빌려 소위 ‘돌려 막기’로 버티던 사람들이 신용한도가 축소되면서 대거 신용불량자에 편입된 것이다. 특히 2003년에는 경기가 더욱 침체되면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악화되어 신용불량자가 더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3.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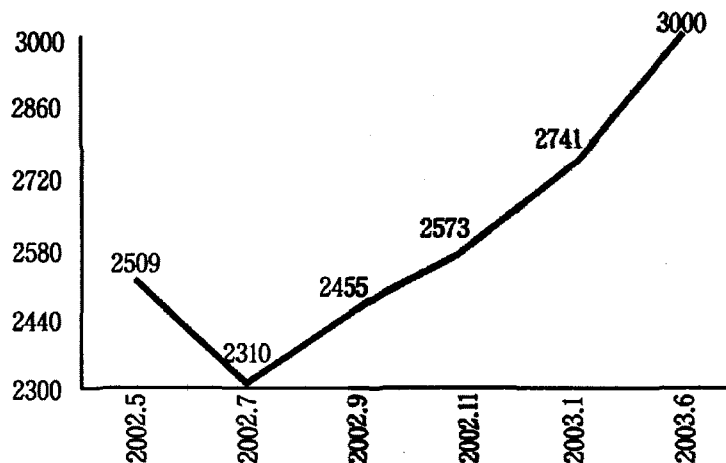
연령별 신용불량자 추이를 살펴보면 40대 이상의 신용불량자가 51.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20대 및 30대 신용불량자도 각각 19.4%와 29.2%에 달했다. 특히 20대, 30대 청년층 신용불량자의 비중은 2001년 12월 45.4%에서 2002년 12월 47.3%로 늘어난 이후 2003년 3월에는 48.6%까지 높아졌다. 신용불량의 사유를 보면, 카드론 연체 증가율이 19.4%로 가장 높았으며, 대출금 연체 및 신용카드 연체도 각각 12.4%와 11.5%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삼성경제연구소, 2003.4.29).

신용불량자의 양산은 신용카드 활성화에 대한 정부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 1999년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근로자 소득공제 혜택 부여,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철폐, 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 등 신용카드 활성화 방안을 시행했다. 세원(稅源)을 투명하게 확보하고 신용사회를 정착시킨다는 명분이었다. 이와 같은 장려정책에 힘입어 카드사 매출액은 급성장하였으나 이때부터 카드사들의 과열경쟁과 신용 없는 신용카드의 남발, 정부의 감독의무 포기 등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02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활동 인구 1인당 4.6장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게 되었고, 연 금리 20%를 웃도는 카드대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카드사들은 과도한 영업비용과 과잉경쟁의 부담을 높은 금리의 대출 서비스로 회복하려고 했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1997년 전체 카드사용액의 47.1%이던 것이 1999년 53%, 2000년 64.6%, 2001년 60.4%로 크게 늘어났다. 카드론까지 합칠 경우 7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유럽 등 카드문화 선진국에선 신용카드 사용의 80%가 물품구매(신용거래)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정반대이다. 현금사용을 줄이자고 만든 신용

카드가 오히려 현금 유통의 수단인 '대출카드'로 변질되어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주범으로 자리잡는 기형적 성장을 하게 된 것이다(주간조선, 2003.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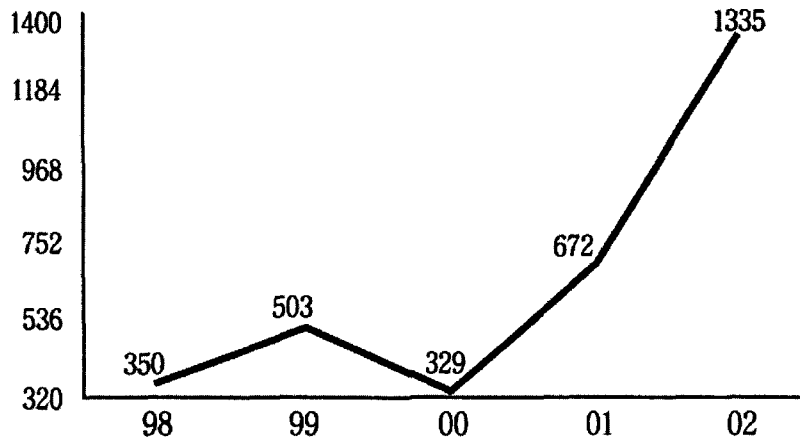
IMF 사태 당시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던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도산의 운명을 피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들도 무리하게 빚을 끌어다 쓰다가는 파산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90년대 미국 노동자들은 신용카드를 미래수익을 담보로 소비를 즐기다가 결국 97년에 100만 명이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금융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개인파산이란 경제능력에 비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이 법원의 면책허가를 받아 부채를 탕감 받는 절차로, 성실한 파산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이다. 2002년 말 우리나라의 개인파산자는 1,335명으로 2001년의 672명에 비해 98.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개인파산을 선고받았지만 빚은 탕감 받지 못하는 이른바 '불량 파산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다. 면책 신청이 기각 당하면 개인파산자로서 각종 권리만 제약될 뿐 아무런 실익이 없는 불량파산자로 남게 된다. 이 같은 불량파산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2000년에는 면책신청자 중 95%가 빚을 탕감 받았으나, 2002년 1~3월에는 68%만이 빚을 탕감 받았다. 특히 빚을 전액 탕감 받는 전부 면책결정비율은 2000년 83%에서 2002년 1분기에는 27% 수준으로 급감했다(주간조선, 2002.2.28; 삼성경제연구소, 2003.2.19; 조선일보, 2002년 10월 11일자).

개인 신용불량자 추이(단위: 천명)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개인파산신청자 추이(단위: 명)



자료: 대법원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가계파산의 증가는 경제범죄의 확산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게 된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금융거래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 고금리 사금융, 유사금융 등이 성행할 수 있다. 빚을 갚기 위한 복권, 도박 등 한탕주의가 확산되고 일부는 사기, 절도 등 범죄행위를 야기 시킬 수도 있다.

가계저축과 소비패턴의 변화

이제 장기간 적금을 부어 목돈을 마련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가계저축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과거처럼 한푼 두푼 모아서 목돈을 마련하겠다는 소비자의 의지가 점차 희박해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는 가계 저축률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998년 19.9%에서 1999년 13%, 2000년 10.5%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2002년 한해 동안 각종 적금에서 1조1600억 원이 빠져나갔다고 했으며, 우리은행도 2001년에는 적금이 3200억 원 증가하였지만 2002년에는 2100억 원이 순증 하는데 그쳤다고 했다. 정기에금의 중도해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90년대 은행의 중도해지 예금비율은 한자리수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20%를 넘어섰다. 2002년 한해 동안 중도 해지된 정기에금만 40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매경ECONOMY, 2003.2.26; 매경ECONOMY, 2003.3.26a).

이와 같은 가계 저축률의 하락은 개인들의 저축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 자산가격 상승, 저금리 기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기인하고 있다. 명품 바람 등 소비고급화 현상과

20대, 30대의 젊은 계층의 무분별한 소비행태, 사교육비의 부담증가, 고령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확대 등이 저축의욕이나 동기를 약화시키게 된다. 최근에는 경기가 악화되면서 가계의 저축여력이 감소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며, 가계대출, 신용카드 등으로 개인신용이 확대된 것도 저축을 안 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저축보다는 현재 소비하는 것이 낫다는 ‘저축대체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가계대출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은 저축을 통해 미래소비에 대비하기보다는 현재소비를 늘리고 미래소비는 차입으로 해결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20대의 저축률 하락은 심각한 수준이다. 외환위기 이후 20대의 저축률은 외환위기 이전(90~97년)에 비해 3.4% 하락했는데 이것은 전체 평균저축률의 하락 폭인 2.2% 보다 매우 높은 수치이다. ‘저축이 미덕’이던 구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의 높은 소비성향도 원인이 될 수 있으나, 평생직장의 개념이 완전히 깨져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진 현재의 상황에서 꾸준한 항상 소득의 여부도 그만큼 불확실해졌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축의욕은 줄어들고 생계부담이 적은 20대 계층에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매경ECONOMY, 2003.2.26; 매경ECONOMY, 2003.3.26a; 삼성경제연구소, 2003.2.10).

3. 재정관리전략

2001년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한 미국인들도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찾아 재테크 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의 미국인들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재테크 패턴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저렴한 금리의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할부금(mortgage, 저당)을 리파이낸싱(refinancing, 대출금차환)하는 것이다. 초저금리 시대인 현재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과거 금리가 높을 때 계약했던 대출금을 갚는 전략이다. 둘째는 여윌 돈은 단기로 운용하는 것이다. 경기전망이 워낙 불투명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만큼 금리는 조금 낮더라도 유동성이 높은 상품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한편 초저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일본인들의 재테크는 불합리한 지출을 최대한 단속하는 한편 틈새 속에서 실리를 하나라도 더 챙기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의 재테크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재테크는 ‘세(稅)테크’에 달려 있다고 한다(Quarterly Magazine of ING LIFE, Summer 2002).

저금리 시대에 적합한 재정관리전략을 절세전략, 분산투자, 해외투자, 부채관리, 사전적 노후준비, 전문가 활용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1) 절세

저금리 혹은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는 투자자가 원하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대안을 찾기로 매우 힘들고,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내야 하는 세금도 절세 하는 것이 성공적인 재정관리전략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마이너스 금리시대에는 절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리스크를 무릅쓰고 투자를 잘 하여 이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과다하게 부담하게 되어 원금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절세 금융상품의 활용

세금이 없거나 적은 절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데, 절세 금융상품은 비과세와 세금우대 상품으로 구분된다. 비과세 상품은 일반 금융상품과는 달리 이자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세금우대 상품은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세 16.5%(소득세 15%+주민세 1.5%)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10.5%(소득세 10%+농어촌특별세 0.5%)만 내면 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1인당 성인 4,000만원, 경로자 6,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우대세율(10.5%)이 적용된다. 즉 연 5% 금융상품의 경우 0.3%의 이자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비과세, 세금우대,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즉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연금저축(신탁),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우선 가입하는 것이 돈 버는 방법이다.

비과세 상품으로 대표적인 상품이 장기주택마련저축(신탁)인데, 2003년 말까지 신규가입이 가능하며 7-10년의 장기 상품으로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이자소득 비과세와 함께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적립식 상품이라는 것이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가입하여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연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경우 연간수익률은 15% 이상으로 현재 판매중인 금융상품 중에서는 최고이다. 장기주택마련펀드도 내용과 가입대상 등이 기본적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같다. 위험 선호도에 따라 채권형, 주식을

포함하는 혼합형 등에서 선택하면 된다.

또 다른 장기 재테크용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혹은 신탁, 보험)이 있는데, 18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불입금액의 100%, 연간 240만원의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의 혜택도 적용된다. 이 상품은 분기별로 300만원 내에서 10년 이상 적립해야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탈 수 있다. 특히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보험사의 연금보험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고소득이거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자산가들에게 매력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생계형 비과세저축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와 독립유공자(유족 등)가 가입대상이다. 최고 가입한도는 2,000만원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한다. 이 상품은 저축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장점이다. 1년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은행 외에 투신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금우대편드를 운용한다. 투신권의 상품은 가입대상이나 조건 등이 예금과 비슷하지만 원금 보장이 안되고 투자실적에 따라 수익을 올리는 점이 다르다. 농협, 수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조합예탁금은 소득세가 없고 올해 말까지 1인당 2000만원까지 농어촌특별세 1.5%만 내면 된다. 단 2004년에는 6.0%(5.0%), 2005년부터는 10.5%로 과세한다.

<비과세 금융상품>

저축종류	취급기관	가입대상	가입기간	비과세한도
장기주택마련저축 (신탁, 펀드)	은행, 투신	만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85m ² 이하 1주택 소유자	7-10년	분기 300만원
생계형저축	전 금융기관	만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	금융기관 및 상품별로 차이	2000만원
연금저축 (펀드, 보험, 신탁)	은행, 투신, 보험	만 18세 이상	10년 이상, 55세 이후 연금으로 지급	분기 300만원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농협, 수협	2ha 이하 농경지 보유농민, 20t이하 어선보유어민	3-5년	월 10만-12만원
출자금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 회원		1000만원
장기저축성보험	보험, 농협, 우체 국	1가구 1통장	7년 이상	보험종류에 따라 차이

동아일보 2003년 5월 9일자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거나 펀드에 간접투자를 하여 획득한 증권의 매매차익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상태라면 여유자금의 일부분은 최소 위험으로, 은행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곳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바로 주가지수 연동형 정기예금과 원금보전형 펀드이다. 주가지수 연동형 정기예금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원금은 보장받으며,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높은 이자수익을 가져오게 된다. 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비해서 최대 9.5%~18% 포인트까지 금리를 더 지급한다.

분리과세상품의 활용

만기가 5년 이상인 장기채권(후순위채권 포함)이나 장기저축의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33%(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부담하고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이라면 33%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신청해야 유리한 것일까?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소득 4,000만원까지는 16.5%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외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8,000만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9.9%~29.7%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를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서만 39.6%의 세율이 적용된다(매경 ECONOMY, 2003.4.30b).

절세형 고금리 금융상품 중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3년 전부터 은행마다 경쟁적으로 발행했던 후순위채권은 비과세 상품으로 농어촌특별세 2%만 부담하면 된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거액 금융자산가가 가입하면 연 6%이상 금리를 지급하는 정기예금 수익률과 맞먹는다. 시중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만기일까지 확정금리를 매월 혹은 분기마다 지급 받으며, 다른 어떤 금융상품보다 많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퇴직금 등 목돈을 굴리는 이자생활자나 고소득층에게 매우 유리한 상품이다. 그러나 자금이 묶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우리나라가 사상초유의 국가 부도사태에 직면하자 원활한 구

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무기명으로 발행한 고용안정채권과 증권금융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은 자금출처조사의 면제와 최고 세율이 50%에 이르는 상속세,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서 거액 금융자산가에게 적합하다. 이러한 비실명채권의 이자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15%~22%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비실명채권 종류 및 발행조건>

채권종류	발행기관	발행금액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고용안정채권	근로복지공단	8,735억원	98.7.29	2003.7.29	연 7.5
증권금융채권	한국증권금융	2조원	98.10.31	2003.10.31	연 6.5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중소기업진흥공단	1조원	98.12.31	2003.12.31	연 5.8

매경ECONOMY, 2003.3.19.

부부간 재산분할

부부간의 재산을 분할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던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위헌판결(2002년 8월 29일)을 받기 전까지는 부부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자산소득은 부부간에 따로 소득이 발생해도 합산해서 과세를 했었다. 현재는 부부의 소득에 대해 각각 과세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이 없는 쪽으로 소득을 분산시켜 놓으면 장래에 발생할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

이자소득시기의 분산

이자수입 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는 방법도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1년에 금융소득(이자나 배당수입 등)이 4,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한 해의 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연도를 분산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

2) 분산투자(diversification)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에서 성공적인 투자의 91.5%는 투자자산의 황금배분, 다시 말해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비율을 당시 경제 상황에 맞게 잘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주식 종목이나 채권 또는 부동산 물건의 탁월한 선택으로 인한 성공적인 투자는 단지 6.7%, 절묘한 매수 및 매도 타이밍에 의한 성공은 겨우 1.8%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동아일보, 2003년 4월 24일자). 이러한 결과는 경기하강과 상승의 사이클에서 자산배분의 중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채테크 환경이 불확실할 때에는 분산투자가 최선책이다. 여유자금을 장기와 단기로 나누고 확정금리형과 실적배당형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다. 우선 금리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확정금리를 지급 받는 절세형 예금과 예전의 고금리 상품에 여유자금의 50%를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단기 고금리인 머니마켓펀드(MMF)에 30%를 투자함으로써 향후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동성을 확보해 놓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나머지 20%는 주식과 관련된 상품에 투자를 해서 '정기예금+ α ' 금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주간조선, 2003.2.27b).

PB(private banking)의 고액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면 평균적으로 인덱스 펀드와 삼성전자 중심의 주식 30%, 채권 50%, MMF 20%로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MMF는 주식시장 대기자금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거액자산가들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가운데 주식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매경ECONOMY, 2003.3.5).

< 정기예금+ α 수익률이 가능한 금융상품 >

투자기간	상품	한도	수익률(연)
1년 이내 단기투자	특정금전신탁 투신사 신탁형저축	3000만원 이상 제한없음	정기예금대비 0.5%P 높음 정기예금대비 1%P 높음
1년 투자	부동산투자신탁 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	500만원 이상 제한없음	6% 이상 (정기예금대비 1.5%P 높음)
1년 이상 장기투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외화표시채권 은행 후순위채권	주로 1억원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정기예금보다 1.5%P 높음 6% 이상

매경ECONOMY, 2003.3.26b.

주식, 채권, 부동산, 은행상품에 적절하게 분산투자를 하는 것은 일반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투자자금의 한계로 여러 종목의 분산투자보다는 특정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나 혹은 잦은 교체매매로 대세 상승추세를 맞이했을 때 시장수익률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간접투자상품을

활용하여 안정적이면서 분산투자자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2002년 9월부터 선보인 투신권의 일반 적립식 펀드는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표적인 간접투자상품이다. 일반 적립식 펀드란 은행의 정기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자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주식이나 채권 관련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목돈 없이도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고, 분산투자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뉴스메이커, 2003.3.13).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600 포인트를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현재의 시점은 간접상품에 투자하기에 매우 적절한 시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수대별로 1년 이내에 30% 이상의 주가가 상승할 확률을 통계로 분석해본 결과, 350 포인트에서 100%, 550 포인트에서 60%, 650 포인트에서 70%, 750 포인트에서는 40%로 각각 나타났다. 600 포인트 대에 진입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30% 이상 상승확률이 60~70%로서 간접상품에 투자하기에 최적기라고 한다. 그러나 주식형보다는 아직은 채권형 상품과 주식형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매경ECONOMY, 2003.5.7).

3) 해외투자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시대로 접어들었고 증권시장은 회복되지 않는 시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전략은 ‘해외투자’이다. 국내 투자자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해외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직접투자란 해외의 부동산,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과 현지 국가 규정상 부동산 투자에는 제약이 많지만 금융자산의 투자는 대부분 큰 제한이 없다. 다만 직접투자의 경우 투자금액이 많아야 하고 투자대상을 스스로 선택해야 하고,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 등의 어려움이 있다. 해외 채권을 사려면 10만~50만 달러(약 1억2000만~6억원) 정도는 있어야 하고 환율변동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어 아직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해외투자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에 더 적극적이다. 국내외 은행과 증권사가 해외 유명 투자회사에서 가져온 펀드가 2002년에만 1조원 이상 팔렸다고 한다. 이러한 해외펀드의 수익률은 지역별, 펀드의 성격별로 큰 차이가 나지만 국내의 채권형 펀드보다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주식형 해외펀드의 경우는 세금 면에서는 국내 주식형펀드보다 불리하다. 국내 주식을 사고 팔 때 얻는 차액은 비과세여서 주식형펀드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지만, 해외주식펀드의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16.5%의 세금을 내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에도 포함된다(동아

일보, 2003년 5월 2일자).

이러한 해외투자의 최대 장점은 대안이 많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금융시장 변동이 심한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좁기 때문이다. 반면에 전 세계를 투자대상으로 삼으면 틈새시장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2002년 10월 메릴린치는 미-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골드펀드’를 시장에 내놓았는데 6개월만에 수익률은 37%에 달하였다고 한다(동아일보, 2003년 5월 2일자).

선진국에서는 중요한 포트폴리오의 수단으로서 이미 해외투자가 각광받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외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어서 해외 직접투자가 활발하다. 씨티그룹 프라이빗뱅크 사업본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인 중상층의 투자 전형은 통화별에 따른 분산 균형투자이다. 예를 들어 10억엔(약 110억 원)을 갖고 있다면 유로(33%), 엔(8%), 달러(57%) 등에 골고루 분산시켜 투자하는 방식이다. 환율과 이자가 동시에 계속 변하고는 있지만 국제적인 분산투자가 약세인 엔화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보다 대체적으로 수익률 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동아일보, 2003년 5월 2일자). 해외투자가 대부분의 경우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많은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한국시장에 투자하는 것처럼 한국투자자도 고수익이나 위험관리를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4) 부채관리

가계부채의 증가는 ‘돈을 어떻게 벌릴 것인가’하는 것보다 ‘빚을 어떻게 줄이고 관리할 것인가’하는 질문을 더 시급한 해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예금금리는 대출금리보다 항상 낮기 때문에 저축보다는 부채의 상환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개인이나 가계는 성숙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하고 자기신용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즉 미래의 불확실한 기대소득에 기초하여 소매금융을 통한 비합리적인 과소비를 할 경우에 상황이 불가능한 과도 부채를 짊어질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 신용사회의 역사가 매우 짧은 하지만,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회적 패널티에 대한 개인들의 올바른 인식과 자각을 하루빨리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부채관리의 일반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신의 현재 재정상태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이다. 자신의 순자산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소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연회비, 이자율, 연체료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포괄적인 부채관리에 대한 원칙을 세

우고 난 후 구체적으로 부채관리전략을 실행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빚을 순자산의 30% 이하로, 대출상환액(원금+이자)은 연간 소득의 30%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부채는 가능한 한 빨리 상환하는 것이 최선임은 말할 것도 없고, 부채의 상환은 기간이 짧은 것부터, 그리고 유동부채 먼저 고정부채는 나중에 상환하는 것이 부채상환의 우선순위 원칙이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자동차 할부금, 전세대출금 등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갚아나갈 수 있다(Business, 2002.4.15).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을 반드시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우선 대출의 용도가 적당한지를 꼭 따져보아야 한다. 대출 용도가 주택구입 등 꼭 필요한 자금을 사용되는지, 아니면 주식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용인지 검토한다. 두 번째는 상환계획이 적절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나의 순소득 또는 총소득 대비 월 부채 상환능력을 계산해 보고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부담하고도 생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대출금이 만기가 지났거나 지체된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적용되므로 대출금의 만기관리도 해야 한다. 대출금의 상환방식도 자신의 소득형태에 맞게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달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샐러리맨은 분할상환 방식을,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NFCC(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가 제시하는 부채관리 7계명 >

1. 부채관련 금융지식을 쌓아라.-수시로 도서관에서 경영관련 서적을 찾거나 금융강좌에 참석해라. 얻은 정보를 통해 구체적인 재무목표를 세워라.
2. 소비계획을 세워라.-모든 비용을 다 적어서 매달 일정하게 지출되는 고정항목과 매달 지출액이 변하는 가변항목으로 나누어라. 예를 들어 매달 지불하는 주택대출은 고정항목이 되고, 생활비는 가변항목이 된다.
3. 항상 가계부를 업데이트 해라.-똑똑한 소비자는 신용카드 지출액까지도 가계부에 적는다. 만약 집에 컴퓨터가 있다면 가계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도 좋다.
4. 비상금으로 쓸 계좌를 만들어라.-만약 집수리나 차 정비를 할 때마다 돈을 빌려야 한다면 항상 부채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예기치 않은 지출에 대비하라.
5. 필요한 곳에 돈을 써라.-현명한 소비자는 약간 부족한 듯 살며 남는 돈은 저축한다. 정말 더 넓은 집을 사고 싶은지 비싼 차를 사고 싶은지 다시 한번 고려해라.
6. 금융상품을 고를 때는 금리에 유의하라.-시장금리가 떨어질 때는 변동금리가 유리하고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는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7. 연체하지 말라.-연체를 하면 수수료뿐만 아니라 신용도도 더 낮아진다.

Business, 2002.4.15.

5) 사전적 노후준비

저금리는 무엇보다 이자소득에 의존하는 고령자 층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노인계층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주된 수입원은 이자소득, 연금, 이전소득 등이 된다. 특히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고령자는 이자소득의 급감을 겪게 된다. 따라서 저금리 시대에는 중장년기에 노후를 미리 준비해야만 노후의 소비축소로 인한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즉 노후설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금융자산의 축적량을 늘리거나 이자소득에 의존하는 노후기간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비할 것이 권장된다. 또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금융자산의 규모가 점차 커질 것이고 노후생활이 불안해짐에 따라 고령자계층은 상속시기를 늦추고 상속규모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택 등의 실물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자산을 빌려쓰고 사망 시에 실물자산으로 상환하는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제도도 고려해 볼 만한 금융상품이 될 것이다.

6) 전문가의 활용

투자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량품을 선택하고 불량품에 투자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추세는 조그만 건물을 짓거나 상점을 내더라도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는다고 한다. 적지 않은 컨설팅료를 주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하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개인에 대한 재정상태 진단이나 자산운용 컨설팅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다. 재테크 혹은 자산관리, 투자는 자신의 노후가 걸려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따라서 투자결정을 하기 이전에 전문가를 찾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고객에게 전문적인 자문과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종합자산관리 전문가로는 **FP**와 **PB**를 들 수 있다.

FP(Financial Planner)란 재무설계 전문가이다. 고객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관리해 준다기보다는 평생 재무설계를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문가이다. 즉 자산관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설계에 맞춘 재무설계를 하고 재무계획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단순한 재테크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저금리인 데다가 위험도 높아졌고 투자방법도 다양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경제와 금융상황은 최적

의 자산운용수단의 사이클을 짧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투자자산을 보유할 여유를 가짐으로써 운용자산의 회소성도 점점 덜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환경의 다변화와 참여기회의 보편화는 자산운용을 과거에 비해 좀 더 전문적인 분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총 금융자산의 30% 이상이 FP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후대비를 위한 재무설계 서비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FP들은 각 개인들의 저축가능금액과 적절한 투자금액, 부담할 수 있는 위험 한도 등을 분석하여 개인의 투자목적과 스타일에 따른 자산배분을 실행하여 투자를 돕게 된다. 전문가의 자산관리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받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기 쉽지만 FP의 관리는 종합관리로서 부채가 많은 사람이면 부채관리를, 또 자산이 적은 사람이면 어떻게 늘릴 것인가를 관리하기 때문에 FP의 활용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PB(Private Banking)란 금융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자산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사람을 Private Banker라고 한다. 즉, 현재의 자산을 어떻게 구성할지, 어떻게 투자하면 수익률을 최대화하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리해주는 '자산관리사'인 것이다. 여기에는 주식, 채권, 예금, 보험 등 기본적인 금융상품에서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경매 등 투자의 개념이 포함된 모든 수단을 재산증식에 활용한다(뉴스메이커, 2003.2.20). PB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개인 고객을 상대로 금융상품의 선정 및 투자관리, 부동산 컨설팅, 세무 지원 등 개인의 재산관리와 증식을 도와주는 첨단 서비스를 지칭한다. 최근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WM(Wealth Management)이란 개념을 강조하기도 한다.

4. 결론

최근 한국은행이 2003년 경제성장률을 5%대에서 4%대로 하향조정 하였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실물경제성장이 둔화되는데다가 물가상승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성장은 저투자자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전망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를 크게 늘릴 이유가 없다. 이는 또 상대적으로 낮은 자금수요를 의미한다. 감소한 기업의 자금수요는 금리를 낮출 것이다. 자금수요 외에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는 인플레이션이다. 본격적인 저 성장 시대에는 자금수요가 낮을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낮

아지기 때문에 금리도 함께 낮아진다. 따라서 2003년 동안은 경제성장률 4%대와 함께 물가와 금리도 4%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매경ECONOMY, 2003.4.30a).

저성장-저물가-저금리 상황에서는 모든 부문의 자산운용이 어려워진다. 우선 금리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예금 등 이자를 소득원으로 하는 투자수단은 인기가 없어진다. 저성장 시대의 기업 자금수요 감소는 은행들에게는 우량 기업고객의 감소를 뜻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비자금융의 중요성의 증가를 의미한다. 소비자금융 중에서도 주택금융은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매경ECONOMY, 2003.4.30a).

재테크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와 '금리'이다. 경기는 경제 전반의 상황을 표현하고 금리는 자금의 방향을 안내하는 신호등 역할을 하게 된다. 2001년부터 시작된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바뀌기 어렵고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저금리를 탓하기보다는 저금리 체질로 재테크 체질을 빨리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기의 흐름과 주가 및 금리의 흐름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이 더욱 요구되며 적절한 자산 배분을 통해 기대수익을 만들고 리스크를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경제, 금리, 증시의 전망에 근거해서 시장의 흐름을 읽는 투자가 필요하다. 시장이 경기상황과 수요에 따라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묻지마'식의 공격적인 투자는 우선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수익률 극대화보다는 위험관리에 치중하면서 확실한 재료를 선별하여 공략하는 '선택과 집중'의 선별적인 투자전략이 효과적이다. 경기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 한 환금성과 수익성은 투자 시 최고의 화두로 자리잡을 것이다.

참고문헌

뉴스메이커 (2003.2.20). "전 세계 투자정보 종합서비스"

뉴스메이커 (2003.3.13). 펀드형 주택마련 금융상품 '짹짹'

동아일보 2003년 4월 3일 목요일. "금리 저공비행 지속될 듯."

동아일보 2003년 4월 24일 목요일. "투자는 정글..... 원금보장은 없다."

동아일보 2003년 5월 2일 금요일. "국내 불안할 땐 해외로 눈 돌려라."

동아일보 2003년 5월 9일 금요일. "부부재산 분할해야 稅테크 유리."

매경ECONOMY (2003.2.26). 초저금리의 그늘. “이자 싼 데 구조조정 안 하면 어때요.”

매경ECONOMY (2003.3.5). 스타PB가 보는 자금흐름. 큰손들 “슬슬 주식투자 나서볼까.”

매경ECONOMY (2003.3.19). 금융. 비실명채권으로 상속세 줄여라.

매경ECONOMY (2003.3.26a). 저축 안 하는 6가지 이유. 돈이 있어야 저축을 하죠.

매경ECONOMY (2003.3.26b). 금융. ‘정기예금+ α ’ 수익률을 찾아라.

매경ECONOMY (2003.4.30a). 성장률 4% 시대. 실업난 극심 1인당 50만원 손해.

매경ECONOMY (2003.4.30b). 절세로 돈벌기 10선. “세금 줄인만큼 호주머니 두둑.”

매경ECONOMY (2003.5.7). 지금은 간접상품 적기. “600 이하에서는 60% 성공.”

삼성경제연구소 (2001.9.5). 초저금리의 충격과 과제. CEO Information 312호.

삼성경제연구소 (2002.2.27). 가계부채 급증의 부작용과 대책. CEO Information 337호.

삼성경제연구소 (2003.2.10). 저축률 변화추이 분석과 시사점.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3.2.12). 제로금리의 파급효과와 시사점. CEO Information 387호.

삼성경제연구소 (2003.2.19). 최근 경기동향과 당면과제. CEO Information 388호.

삼성경제연구소 (2003.4.29). 개인신용불량자 사상 최고수준. 경제동향 Brief 313호.

삼성경제연구소 (2003.4.30). 이라크전 이후 국내외 경제의 향방. CEO Information 398호.

조선일보 2002년 10월 11일자. “최근 신청자중 68%만 법원서 ‘빚탕감’ 결정.”

주간조선 (2002.2.28). 빚 권하는 사회, 가계파산 ‘경보’ 올렸다.

주간조선 (2003.2.27a). 월가의 시각 “신정부 경제정책에 달렸다.”

주간조선 (2003.2.27b). ‘여웃돈’ 분산해서 관리하라.

주간조선 (2003.4.24). 카드사·정부가 신용카드 ‘부실’ 주범.

Business (2002.4.15). 개인 부채관리시대... 빚도 잘 굴리면 재산.

Quarterly Magazine of ING LIFE (Summer, 2002). 재테크, 미국인들은 어떻게 할까?